

# 여권발 쇠신론 분출...당정 동반 인적개편 이어질까

### 일각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압박...비대위 구성 주목 당 리더십 붕괴 동반 책임 대통령실 인사 개편 주장도

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국민의힘의 위기 수습책 모색 과정에서 여권발 인적 개편론이 분출하고 있다.

당내에서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2선 후퇴 요구와 함께 대통령실 인사 개편 주장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핵관 이선 후퇴론은 당장 당 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고 이미 선언한 '원조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일각의 원내대표직 사퇴 압박으로 불뚱이 튀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SNS에 "지도부 총사퇴 하시고 새로이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비상대권을 주어 이준석 대표 체제의 공백을 메꾸어 나가는 게 정도(正道) 아닌가"라며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석계인 김용태 정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지금 전혀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권 원내대표의 거취 정리 요구에 가세했다.

다만 당 내에서는 원내대표 사퇴 요구는 현 상황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 내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이번주 당내 내홍 상황을 수습하면서 비대위 체제를 안착시키느냐에 따라 향후 입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을 향한 거취 압박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앞서 조수진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총체적인 복합위기다.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쇠신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당·정·대 여권 3축의 동반 쇠신론을 전면내 내건 뒤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달라. 경권교체를 해냈다는 긍지와 자부심은 간직하되 실질적인 2선으로 모두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포스트 권성동 원톱체제를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친윤(親尹)계 보다는 중립적 인사 가 주를 이룰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비대위원장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에 종속되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최고위원의 줄사퇴와 초선의원 32명의 비대위 전환 촉구 연판장 등 최근 일련의 움직임에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에 친윤 그룹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도 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어떤 세력이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를 다 느끼고 있고 보고 있지 않다. 과연 이걸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부진 상황과 맞물려 당 리더십 붕괴 상황의 동반 책임 차원에서 대통령실 인사 개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 의원은 최근 "비서실에서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며 "당 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그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의 사퇴를 설득했다는 보도에 대해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다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가운데)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선 이상 중진의원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교육부 수습 나섰지만...입학연령 하향에 거세지는 반발

### 총리 "수요자 의견 청취하라" 부총리는 '해명 도어스테핑'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해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1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밀려내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하고, '입학연령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살 하향 조정하기로 한 교육부의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박 부총리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박 부총리도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 나선 데 이어 오후에는 여의도 한국교육안전시설원에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닫)을 자청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대안으로 목표를 이루도록 정부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안에 대해 유아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가정에 불복 공백이 커질 수 있으며 유아교육·보육기관부터 학교까

지 현장에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계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0개 단체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입학연령 하향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이 진행 중이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2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시도교육청과 교원,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발표해야 하는 사안을 급작스럽게 내놓고 나서 "아직 검토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하는 것 자체가 선후 관계가 바뀐,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尹, 휴양지 방문 전면 취소...“마음 편히 휴가갈 상황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첫날인 1일 휴양지 방문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3일 정도 지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가

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마음 편히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낼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택에 머물며 정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각계 인사들을 만나 조언을 경청하는 물밑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라며 "숨고르기를 하면서 취임 이후 두 달여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정국을 구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주로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 머무를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국방위 데뷔전 이재명 “안보는 정쟁대상 아냐”

### 박용진·강훈식 단일화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주자들 간 경쟁력 차별화도 본격화하고 있다.

예비경선(컷오프)을 '가뿐히' 통과한 이재명 후보는 '민생과 통합'을 앞세워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고, 이에 맞서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단일화 카드를 매만지면서도 구체적 시기 등을 둘러싼 신경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 후보는 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다. 지난 6·1 보궐선거에서 초선 배지를 단 그의 상임위 데뷔전이었던.

이 후보는 상견례 성격의 인사말에서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국방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외교와 국방, 안보 문제는 정

쟁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향후 당 대표가 돼서도 안보 문제에서 만큼은 협치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지는 8·28 전당대회까지 이 후보는 '민생·경제 수호'와 '당내 통합'을 부각할 방침이다.

'97 주자'인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컷오프 닷새째인 이날도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날을 세우며 대치했다.

컷오프 결과가 나오자마자 강 후보에게 단일화 시한(8월 3일)을 내걸었던 박 후보는 연일 압박전을 지속하고 있다.

박 후보 캠프에서는 인지도에서 월등히 앞선 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면 강 후보도 끝내 양보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연합뉴스

## 민주, '덧글·좋아요' 당원 5만명 의견 모이면 지도부 답변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 홈페이지 내에 당원들의 의견이 모이면 지도부가 답변하는 '당원청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오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만명의 당원들이 동의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관련 내용에 대해 중앙당에서 답변의 의무를 갖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2만명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

을 달아서 동의를 표시하면 중앙당 지도부에 보고되고, 이 숫자가 5만명을 넘으면 (지도부는) 답변을 해야 한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문자폭탄"을 지양하고 당내 건설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투자자 모심

1. 자금 - 10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천  
H. 010-3605-5000

##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 1.新安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